

與野 싸움에 ‘예산 국회’ 난항... 정부 국정과제 등 대치

정부·여당 추진 법안에 야당 반발
내일까지 예산안 감액 심사 마쳐야
10곳 중 6곳, 자체 예비심사도 못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증액 및 감액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관련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일에 시작한 감액 심사는 22일까지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23일부터 할 예정이다. 639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감액 심사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산안 증·감액은 여야 협의는 물론 정부 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지난 17~18일 있었던 심사 과정만 보면 쉽지 않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7곳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됐지만, 상당수 내용은 보류됐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 사안은 쟁점이었던 경찰국, 지역사회상품권 예산안 등에 불과하다. 경찰국 관련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의 끝에 기존 2억 9000만원에서 10% 삭감(1억8800만원)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역사회상품권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에서 5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문제는 남은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감액 심사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22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감액 심사가 남은 10곳 가운데 6곳은 상임위 차원의 자체적인 예비 심사도 못한 상황이다. 예비 심사 단계에서 빚어진 파행은 대통령실, 정부 국정과제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

운영위는 ‘경호처 시행령’,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사업’ 논란으

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교육위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예비 심사가 파행했다. 예비 심사가 남은 기획재정부(21일), 정보위(23일) 역시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 관련 여야 입장 차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위는 여야가 예비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예산 부수 법안 심사 마감은 30일까지인데, 여야 갈등 끝에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이 지난 16일 마쳤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있다.

대표적인 게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대한 야당 반발이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0.15%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폐’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조건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금융투

자소득세 유예 조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21일 예정된 기재위 심사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여야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심사보다 관련 논쟁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당의원 부원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된 데 이어는 상황이다.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기소되면서 이 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예산 심사보다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北 도발에 “확장억제 강화”... ‘강대강’ 국면

“강력한 대북 규탄·제재 추진”
유엔 안보리, 내일 대책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6개의 경제·정치 분야로 이뤄진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 회담을 통해 ‘프놈펜 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

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ICBM의 비행 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아울러 북한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 영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그리고 딸의 모습도 공개했다.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타격훈련을 비롯해 동해상에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을 실시했고, 19일에는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B-1B 전략폭격기가 2주만에 한반도에 재전개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NSC에 임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 사회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스페인 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에서도 “(북한은)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며 “산체스 총리와 저

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후 정부 성명을 추가로 발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쉐어 쓰기로 한미일을 동시 겨냥한 지난 5월 25일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의

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ICBM 발사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오는 21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핵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회의 소집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으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긴급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최측근 연이어 구속...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시화

김용, 정진상 각각 구속
민주당 ‘정치탄압’ 강경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당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당의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선자금 등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뤘을 것으로 의심하

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검찰 수사 대응법을 교육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조용천 민주당의원 등은 공식 인터뷰에서 정진상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당무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당 차원에서 나서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에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 나와 “정 실장은 지금 사법 처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택지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정 전 실장)이 또 구속됐다. 유검 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겹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태홍 기자 pth7285@